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1995. 12.

이 우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 문

통일과 관련된 용어 중에 통일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통일환경이란 통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일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이 기본적으로 한민족 즉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단이 그러하였듯이 통일도 국제정치적인 맥락과 유리될 수 없다. 따라서 통일환경에는 남북한의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조건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환경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상황이나 국제적 역학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통일과 관련된 남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더 나은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은 통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본 보고서는 통일환경으로서 남한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작업의 하나이다.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대주제에 아래, 특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갈등이 통일문제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 존재여부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국민들의

통일문제 인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실상부하게 국민적 합의
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한국사회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고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세대간 의식차이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통일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성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젊은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대 이하의 젊은층은 민족의식이 희박하고, 통일도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일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의식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세대간 갈등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존재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통일에 대한 세대갈등이 존재한다면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통일정책에 세대간 논란으로 통일정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둘째, 현재 통일을 기획하는 세대와 통일을 담당할 세대간에 괴리가 파생될 수 있으며, 셋째, 통일 이후 세대문제가 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회계급 못지 않게 세대는 사회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변화의 속도가 급격할 경우 각 세대들간에 인식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연령집단, 동기집단, 동일한 역사 경험집단, 특정 생애주기집단 등을 의미한다. 어떠한 기준의 세대가 중요한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해당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세대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세대의 획정이나 구분이 그 세대가 속해 있는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시기의 사회변화를 특정한 세대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세대와 사회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

한국사회는 식민지경험, 한국전쟁, 군부통치, 민주화 등 역사적 단절이 심한 현대사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급속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는가 그리고 의식형성기에 사회발전의 단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세대간 의식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전쟁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 권위주의적 군사정부하에서 성장을 제일시했던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으며, 집단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세대는 민족정서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신의 몰락과 민주화 투쟁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집단이나 민주화 이후에 성장한 젊은세대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경제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다. 젊은세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동시에 탈이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특히 탈산업사회의 징후가 나타나는 1990년대에 성장한 현재의 20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일반의 세대간 의식차이가 존재한다. 기성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통일우호국가로 기성세대들은 미국을 첫번째로 보고 있으나 젊은세대는 통일 우호국가가 없다는 의견이 많으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젊은세대는 철수 내지 감축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통일정책에서도 세대별 의식격차가 있다. 기성세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젊은세대는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대별 의식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성세대는 절대적으로 통일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젊은세대는 통일이 되면 좋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4. 통일과 세대 갈등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통일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젊은세대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독특하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반면, 젊은세대는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족적 당위성을 토대로 한 통일정책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인 사회갈등을 일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각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의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성장배경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세대간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각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통일정책 과정에 수렴하고, 이를 다시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결 론

현재의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세대간 의식차이는 세대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를 사회 전반적인 세대갈등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고유 의 문제의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세대가 갖고 있는 북한관, 통일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통일정책은 추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론	5
제 II 장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8
1. 세대의 개념	8
2. 세대문제와 사회변동	12
제 III 장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	17
1. 한국의 세대갈등	17
2.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	34
제 IV 장 통일과 세대갈등	50
1. 통일과정에서 세대갈등의 의미	50
2. 세대갈등 해소방안	58
제 V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8

제 I 장 서 론

1. 문제제기

현재 남한체제가 갖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통일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국가로서 남한은 원칙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집단간 의견차이는 통일정책의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다.¹⁾ 둘째, 남한 내에서 특정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고, 국가는 통일정책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²⁾ 셋째, 이와는 달리 지배세력이 권력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³⁾ 넷째, 현존하는 남한의 제반 문제들이 북한주민들에게 부각되어 이들이 남한과의 통합을 꺼리게 되어 민족단위에서 통일에 대한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
- 1)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정책의 변화과정도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갈등과 조정과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전향적인 통일정책의 수립에 재야의 통일운동의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정부의 통일정책은 재야나 학계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 2) 불경기나 실업문제와 같은 경제문제가 발생하거나, 선거 등의 국내 정치적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면 통일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3) 군사정권 시절에 지배집단이 안보논리를 내세워 기본권을 제약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제반 문제점들은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던 간에 장기간 분리되어온 두개의 사회체제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진통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⁴⁾ 이 경우 새로운 정치·사회·경제 환경에서 촉발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으나, 기존의 사회문제들이 통일후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증폭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남한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통일 이후에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

현존하는 남한의 문제들은 통일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남한내의 사회문제들은 통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통일은 의는 남한의 내부사정과 유리된 채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⁶⁾ 무성한 통일논의가 실효를 얻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기존의 통

4) 이우영,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한국언론학회·중앙일보사 공동주최 심포지움, 「통일 그 이후」(1995. 9. 21) 발표 논문 참조.

5) 예를 들어 남북간에 모두 남아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결합하여 더욱 위세를 떨칠 수도 있으며, 남한의 영호남갈등과 북한의 ‘함경도 제일주의’가 융합하여 지역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6) 예를 들어서 통일을 소망하는 집단은 누구이며 반대로 통일을 반대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그리고 통일을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단계적 통일방안(혹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할 사회집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드물었다. 또한 남한 체제가 통일을 추진할 만큼의 사회·정치·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부족하였다. 통일정책의 골격을 정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전략의 수립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곤 하였다. 현재 남한의 구체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환경문제를 제외하거나, 예설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논의들이 남한 현실과 유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이 강력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남한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통일과 연관시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일차적으로 통일정책의 적실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바람직한 사회체제를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은 해방과 전쟁 그리고 공업화를 통하여 극심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결과 남한은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었고 경제적 풍요를 획득하였으나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불균형성장론으로 인하여 도농간, 지역간,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성장은 생태계의 급속한 파괴를 동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수준의 변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은 문화적 변화는⁷⁾ 가치관의 혼란을 동반하였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증가와 같은 공동체파괴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회적 갈등 증대는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⁸⁾ 때로는 체제통합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통일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집단간의 의견 불일치가 극심할 경우 통일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갈등에 주목하고자

7) 오그번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지체(cultural lag)라고 하고 있다. William F. Ogburn, *On Culture and Social Chan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4) 참조.

8)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Y.: Free Press, 1956).

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회에서는 세대 간격이 축소되고, 세대간 갈등은 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것은 각 세대가 겪는 사회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⁹⁾ 예를 들어 식민지 일본 교육을 받은 노년층이 선호하는 대중문화와 미국식 교육을 받은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대중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고도성장기에 취업한 현재의 장년층과 그 이후에 취업한 청년층의 일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분단 이전의 상태를 경험한 세대, 전쟁을 통하여 북한과 전투를 경험한 세대, 전쟁의 결과 궁핍을 경험한 세대, 군사정권에서 반공이테올로기를 학습하였던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통일 이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현상을 고려한다면 획일적인 의견수렴보다는 사회 제집단의 다양한 견해들을 파악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세대간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9)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0), p. 8. 세대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급문제나 지역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3권 1호 (1991 봄), p. 252.

의식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통일과정에서의 세대간 인식차이에서 비롯되는 의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통일 이후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대간 사회갈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론

세대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양적인 분석은 세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질문지를 활용하여 사회조사를 하는 것이다. 양적인 분석은 각 세대의 전체적인 의견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질문지법은 단순한 의견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응답자의 동기 등은 알아내기 어렵다. 질적인 방법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세대의식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심층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심층면접은 조사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조사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적인 접근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솔직한 현실 인식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적인 방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세대간 의식조사는 기존의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

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름할 것이다. 각 언론기관이나 연구단체들이 기존의 수행했던 여론조사와 민족통일연구원이 1992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세대간 의식구조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적 접근의 차원에서 총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의 각 지역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각 1명씩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신세대의 의식구조가 독특하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는 5명의 20대를 심층면접하였다. 면접은 1995년 9월에 실시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 등의 소주제별로 비구조화된 면접법(unstructured interview)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 흔히 신세대와 구세대로 나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의 구분이 있다. 한국에서는 35세를 경계로 그 이하를 신세대로, 36세 이상을 구세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으나,¹⁰⁾ 전국적 표본조사에서 연령에 따른 세대구분의 기준은 40세로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31%), 다음이 30세(24%), 35세(14%)의 순서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¹¹⁾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집락분석을 한 경우에도 40

10) 현대사회연구소, 「세대간의 정치: 사회의식 비교연구」(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89).

11)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 13.

세를 기준으로 두개의 집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기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고 다시 40세를 기준으로 신구세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20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것은 20대가 '신세대'로서 최근에 주목받고¹²⁾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대가 의식구조의 변화양상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은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세대갈등과 유리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세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의식차이와 일반적인 세대갈등과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신세대는 현재의 젊은 층을 일컫는 말로서 1990년 이후 각종 매스컴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한편에서는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적 개념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각종 경험적 연구들에서 신세대의 독특한 의식구조, 생활양식 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제성이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험적 차원에서는 신세대를 '연령개념'으로 볼 것인가 '태도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안영노, "신세대: 그들의 정치경제," 현실문화연구회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p. 100. 이론적으로는 양자가 결합된 것으로 보지만 사회조사에선 현재의 20대를 신세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일보 실시 여론조사 「신세대 정치의식」, 1995. 7~8. 신세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한국일보,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서울: 한국일보사, 1990); 현실문화연구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박재홍,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호 (1995 가을); 강영희, "신세대와 구세대의 고뇌 어린 화해," 「사회평론·길」(1993. 9); 주은우,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21호 (1994 봄); 고길섭, "신세대론을 비판한다," 「문화과학」(1994 봄); 이득재, "계급에서 세대로," 「사회평론」(1993. 3).

제II장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세대의 개념

사회학 분야에서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은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고,¹⁾ 이후 세대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변동의 폭이 크고 빠를수록 세대간의 의식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세대갈등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의 성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세대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변동 방향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세대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대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세대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대 연구가들이 사용해 온 세대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²⁾

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의 원리(kinship descent)로 세대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회인류

1)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 Kecskemeti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2) David I.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최근 사회학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로 전승되는가 아니면 단절되는가가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다.

②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동기집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출생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생애 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러한 경험을 그 세대 특유의 의식 혹은 행위 양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③ ‘청소년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이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구분에서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중요 분석대상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세대가 인간 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task-homogeneous cohort)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④ ‘전후 세대’나 ‘4.19 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로서 역사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 개념에서는 기간효과(period effect)가 관심사가 된다. 이 개념은 동기효과 개념과 마찬가지로 주요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 의식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다만 동기효과가 통상 제한된 기간중 주요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함에 비하여, 여기서는

주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범위의 동기효과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범주는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세대라는 생애주기상의 범주는 연령상으로의 범주와 결합될 수 있으며, 특정한 연령층의 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연구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대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위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의미로 세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세대란 말이 나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세대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세대연구에서는 연령효과, 동기집단효과, 기간효과에 대하여 개념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세대간의 의식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한 차원의 세대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각 요인들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규명함으로써 그 사회의 세대간 역학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의미로 세대를 개념 규정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실제적인 자료수집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라이더(Ryder) 같은 사람은 세대 개념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앞의 첫번째 의미로 한정해서 세대의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³⁾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3) Norman B. Ryder,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계 계승의 단위로 국한시키자는 제안은 한국과 같이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의 역동성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⁴⁾ 우리나라의 세대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동기효과로 세대를 개념 규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효과, 동기집단효과, 기간효과의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⁵⁾

세대의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동기효과나 연령계층은 인구학적 범주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역사적 실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대가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6 (1965), p. 853.

- 4) 박재홍,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p. 17.
- 5) 특히 사회체제의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동기집단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동기집단효과는 어떤 세대가 받은 교육과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독특한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나이를 먹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다. 연령효과는 나이가 들에 따라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측면으로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이다. 유의미한 연령효과만이 존재하는 경우, 사람이 바뀌어도 해당사회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은 유지되어 나아갈 것이나, 반대로 동기집단 효과가 관여된 것이라면 사회문화적 원형은 소위 세대교체라고 하는 연령층의 교체와 더불어 변모해 간다. 그리고 동기집단효과가 기간효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령효과가 사회체제의 변화에서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체제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집단이 어떤 연령주기에 있는가에 따라 행위양식이나 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기집단효과, 기간효과, 연령효과는 개념적으로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과정에서는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적 문화적 권역(historical cultural region)에서 출생한 사람이 공동운명체로서 구체적 연대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하임은 이와 같은 세대 집단을 ‘실재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하임은 의식형성기의 사람들이 사회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면 비로소 의미있는 실재세대가 된다고 보고 있다.⁶⁾

현재 한국사회의 세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경험한 사회역사적 사건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60대는 한국전쟁세대로 50대는 4·19세대로 40대는 유신세대로 30대는 5·6공화국 세대로 20대 이하는 신세대와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구별을 할 경우에도 동기효과나 기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세대의 구분은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겠으나, 의식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대효과가 작용을 하였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대문제와 사회변동

사회변동의 과정에는 변동을 주도하는 사회집단이 존재한다. 서

6)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 302~304.

구사회에서는 산업화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였던 자본가계급이 존재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은 지식인 집단이나 군부 집단이 사회변화의 추동집단으로 주목된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사회변동이론에서는 사회계급 혹은 사회계층이 사회변동의 중심이 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변동이나 변혁을 이야기하는 경우 사회계급이 논의의 중심이었다.⁷⁾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세대도 사회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사회적으로 공통적인 위치(similarly located)를 점하고 있으며,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를 갖게 된다.⁸⁾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새롭게 세상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의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동일한 세대위치를 점한 청소년들의 공통의 경험은 동일한 세계관(Weltanschauung)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층화(stratified)된 의식은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carrier

7) 한국사회에서 계급이 중심과제로 부각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진보적인 학계를 중심으로 계급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변혁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공제욱, “현대 한국 계급연구의 현황과 쟁점,”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서울: 한울, 1985) 참조. 계급론에 대한 관심이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 몰락으로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와 사회」, 23호(1994 가을) 특집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참조. 사회계급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사회계층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차중천, “한국사회계층에 관한 실증주의적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인식논쟁」(서울: 법문사, 1990) 참조.

8)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 297.

group)의 독자적인 정치적 지향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의식은 계급의식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⁹⁾

세대가 사회변화과정에서 갖는 역할이나 중요성은 세대가 속한 사회의 사회역사적 맥락(social-cultural context)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의 변화속도가 완만하다면 세대별 세계관의 차이가 적을 것이고, 세대의식이 약화되어 실질세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세대의 경계선도 불명확하고 세대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변화가 급격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환경 아래서는 세대간 공통 경험의 차이도 클 것이고¹⁰⁾ 세대의식이 뚜렷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대가 사회변혁에서 중요한 사회집단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격변기에는 세대가 사회변화의 주도적 집단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았다. 일차대전 직후 혁명과 반혁명의 물결에 휩쓸렸던 유럽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른바 '1914년 세대'로 불리는 당시 지식인과 청년학생들은 피폐화된 유럽의 정신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일체의 기성 세대적 가치관을 '악마'로 규정하고 세대전쟁을 표명하였었다.

9) 포이어는 세대의식이 계급을 초월하여 젊은 세대를 통합시키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Lewis A. Feuer, *The Conflict of Gen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69), pp. 31~32. 그러나 한국의 80년대 학생운동을 보면 계급의식을 초월하는 세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박재홍,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 질적 접근," p. 20.

10)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 115.

현대사회에서 세대는 사회변동에서 더욱 중요한 집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계급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¹⁾ 또한 도시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보급으로 도시·농촌간 지역간 격차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대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세대문제가 부각되는 대표적인 예가 선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대분포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선거전략에서 세대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세대가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세대간 의식 차이(generation gap)나 세대갈등(generation conflict)이 반드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¹²⁾ 기본적으로 각 세대간 의식차이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으나,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거나 세대갈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면 세대차이는 사회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대차이는 그 사회의 잠재된 문제들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발

11) 계급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고, 계급갈등은 잠재화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사회에서 최소한 표면적으로 계급갈등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계급 중심의 사회운동을 약화시킨 결과 상대적으로 세대의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득재, “계급에서 세대로,” 『사회평론』 (1993. 3), p. 126.

12) 세대갈등은 ‘드러난(explicit) 세대갈등’과 ‘감추어진(implicit) 세대갈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박재홍,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집 (1995 가을), p. 654.

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제가 사회의 제반 갈등을 흡수할 탄력성이 부족하거나 세대별로 동의할 수 있는 체제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이 부재할 경우는 세대갈등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대갈등이 사회체제의 통합을 저해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갈등이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이념적 갈등이 세대갈등을 증폭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세대갈등이 체제 전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대갈등이 사회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교육체제나 문화체제는 세대갈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세대와 사회변동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reciprocal relation)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세대가 형성되고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은 그 세대가 속하여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세대는 사회변동과정에서 전체체제(혹은 하위체제)의 변화를 촉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제Ⅲ장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

1. 한국의 세대갈등

한국사회는 식민지경험, 한국전쟁, 산업화, 군부통치, 민주화 등 역사적인 단절이 심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방 이후에는 1950년의 한국전쟁, 1960년과 1961년의 4·19와 5·16, 1972년의 유신, 1980년의 5·17 및 5·18, 1987년의 6월항쟁 등 거의 주기별로 전체 체제가 유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경험 유무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의식체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전 세대(60세이상)는 식민지상황을 경험하였고, 건국과정과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집단이다. 이들은 식민지 경험을 통하여 민족주의 의식을 내면화하였으며 독립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을 시대적 사명으로 자각했던 집단이다. 이 세대는 전통적 농업사회의 사회적 기반에서 성장함으로써 권위주의, 집합주의, 특수주의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대적 시민의식의 내면화에도 철저하지 못하다. 또한 건국과 전쟁의 경험으로 강력한 국가에 대한 향수가 짙다고 볼 수 있다.

40대와 50대는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로서 강력한 반공의식을 내면화하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질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지

녀 온 세대이다. 50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일지라도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지 못한 반면, 4·19 학생혁명과 5·16 쿠데타 그리고 한일조약반대 투쟁(6·3 사태)이 성장기의 중요 사건이었다. 40대는 경제성장정책, 유신 등이 깊은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40대나 50대는 민주화의 이상과 권위주의적인 정치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 온 세대이다. 이들은 산업화의 진전으로 현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나 성장기의 교육체제는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를 여전히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대·30대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대중사회화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탈냉전시대에서 탈산업사회적인 이념과도 접촉하였으며, 사회구조의 평등화와 인간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성취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대중사회화 등이 구조적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심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¹⁾ 30대는 유신시대를 경험하였으나,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다시 군부통치가 들어서서 정치적 격변기에 성장기를 보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좌절을 경험한 까닭으로 정치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20대는 탈냉전이 본격화되고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정착된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이들은 민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자본주의체제

1)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1994), pp. 229~231.

에 익숙해 있으며 정치적인 관심보다는 문화와 여가에 관심이 많다. 20대나 30대 모두 현대화된 산업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탈권위주의적이고 현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해방후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경제적 사건들은 의식형성기의 각 세대들에게 차별적인 세계관을 갖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세대간 의식차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공업화와 자본주의화의 진전은 사회체제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결과적으로 각 세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표 1> 최근의 학생운동에 대한 견해 (단위: %)

	30대 이하	40대 이상	계
있어야 한다.	57.4	34.2	48.8
없어져야 한다	25.1	47.5	33.4
잘 모르겠다	17.5	18.3	17.8
계	100.0	100.0	100.0

* 30대 이하 749명, 40대 이상 440명, 전체 1189명

** 출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p. 24.

되었다. 따라서 동기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대차이의 존재를 규명하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에서는 세대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²⁾ 40세를 기준으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어 살

2)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조혜선,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펴본 1990년의 한국사회학회의 조사연구에서는 세대간 의식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젊은세대가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반면 기성세대는 보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이다(<표 1>참조). 30대 이하의 학생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인 반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필요없다는 견해가 4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국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기성세대의 58%가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라고 보는 반면, 젊은세대의 58%는 미국은 자기이익에 충실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11%나

<표 2> 세대별 미국에 대한 인식 (단위: %)

	30대 이하	40대 이상	계
도움을 준 나라	21.6	57.7	35.0
피해를 준 나라	11.1	5.0	8.8
자기이익에 충실한 나라	58.2	27.3	46.8
잘 모르겠다.	9.1	10.0	9.4
계	100.0	100.0	100.0

* 30대 이하 749명, 40대 이상 440명, 전체 1189명

** 출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p. 31.

되었다(<표 2> 참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세대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현행 학력별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표 3> 현행 학력별 임금격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30대 이하	40대 이상	계
현재상태가 좋다	5.5	13.6	8.5
차이가 적어져야 한다	63.3	54.2	59.9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	28.7	27.7	28.3
모르겠다	2.5	4.5	3.3
계	100.0	100.0	100.0

* 30대 이하 749명, 40대 이상 440명, 전체 1189명.

** 출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p. 38.

임금격차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현 상태가 좋다는 30대 이하는 5.5%로 40대 이상의 응답비율 13.6% 보다 적은 반면 차이가 적어져야 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63.3%와 28.7%로 40대 이상의 응답비율 54.2%, 27.7%보다 많다. 따라서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평등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경제적인 면에서 세대간 의식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이다. 30대 이하는 일 우선 이라는 응답비율이 29.8%이고 여가 우선 이라는 응답이 65.3%이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서는 각각 61.7%와 35.6%로 완전히 대별된다(<표 4> 참조).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평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여가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편의주의적이고 편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가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비율은 40대 이상(26.9%)보다 30대 이하(31.5%)에서 높았고, 사회적 성공의 요소로서 배경이나 연줄을 중시하는

<표 4>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단위: %)

	30대 이하	40세이상	계
적게 벌더라도 여유있는 생활을 즐겨야한다	65.3	35.6	50.5
덜 놀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29.8	61.7	45.8
모르겠다	4.9	2.7	3.7
계	100.0	100.0	100.0

* 30대 이하 749명, 40대 이상 440명, 전체 1189명.

** 출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p. 43.

경향이 30대 이하에서 더욱 높았다(26.1%, 17.2%). 또한 “아는 이에게는 친절하나 모르는 사람은 푸대접하는 우리 사회의 풍조”에 대하여 40대 이상은 57.5%가 조속히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답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오직 44.2%만이 그렇다고 말한다.³⁾

사회 의식의 차원에서는 30대 이하의 젊은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결혼이나 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는 차이가 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젊은세대는 나쁘다는 견해는 44.8%인 반면 기성세대는 68.8%이다. 독신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세대별로 의식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독신주의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30대 이하는 25.9%인 반면 40대하는 63.9%나 된다.⁴⁾ 그러나 30대 이하의

3)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p. 42~43.

4)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 70.

젊은세대는 인내심이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표 5> 다수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는가?

(단위: %)

	30대 이하	40세 이상	계
그렇다	54.2	67.6	60.9
아니다	30.5	20.5	25.5
모르겠다	15.3	11.9	13.6
계	100.0	100.0	100.0

* 30대 이하 749명, 40대 이상 440명, 전체 1189명.

** 출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p. 64.

한 경향은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30대 이하
는 부부간에 뜻이 맞지 않을 때 이혼하는 경우에 대부분 나쁠 것
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기성세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
히고 있다. 실제로 1988년을 기준으로 이혼 건수 중 남자는 30대
가 49.7%, 여자는 20대가 4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⁵⁾

세대별 의식차이는 한국사회의 제반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6년에 성인가구주(40세 이상)와 대학생집
단과의 의식구조를 비교 조사한 한완상의 연구에 따르면,⁶⁾ 정치

5) 앞의 책, p. 65.

6) 여기서 참조하고 있는 연구조사는 1986년 12월 서울대학교 부설 사회
과학연구소가 전국의 성인가구주 118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40세 이상 가구주 740명을 추출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전국의 대학
생 504명에 물어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대학생이 세대를 대표할 수

현실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55.2%가 ‘매우 불만스럽다’고 대답한 반면 기성세대의 16.0%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경제현실이나 사회현실에 있어서도 세대간 의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현실에 대한 대학생집단의 ‘매우 불만’과 ‘불만스럽다’라는 응답이 모두 63.0%인 반면 기성세대의 불만 표시는 30.3%에 불과하다.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대학생의 불만족 비율이 72.1%인 반면 기성세대의 불만족 비율은 43.7%이다(<표 6> 참조).

세대간 의식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평가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젊은세대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으며(81.3%), 기성세대는 젊은세대를 ‘버릇없다,’(79.0%) ‘낭비적이다’(82.2%)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⁷⁾ 세대평가는 1992년도에 심층면접을 통한 세대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⁸⁾ 이와 같은 세대평가는 세대간 의식차이가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세대문제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세대간의 의식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5년도에 실시한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육 등의 여타 변수들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세대변수의 β 계수가 0.31, 교육변수의 β 계수가 0.26, 지역변수의 β 계수가 0.15, 소득변수의 β 계수가 0.05였다. 따라서 세대변수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집단을 세대집단으로 인식하여 기성세대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pp. 253~286.

<표 6> 현실의 여러 측면에 대한 세대별 평가 (단위: %)

	기성세대	대학생
정치현실에 대한 평가		
매우 불만	16.0	55.2
불만스럽다	40.1	37.7
그저그렇다	35.2	6.7
만족스럽다	8.2	0.2
매우 만족	0.6	0.2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		
매우 불만	5.3	22.0
불만스럽다	25.0	41.0
그저그렇다	46.1	33.0
만족스럽다	22.3	3.1
매우 만족	1.3	0.9
사회현실에 대한 평가		
매우 불만	8.5	27.5
불만스럽다	35.2	44.6
그저그렇다	45.2	25.3
만족스럽다	10.5	2.2
매우 만족	0.7	0.4
총 수	697	451

* 출처: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연구에 대한 한 연구,” p. 259.

- 7)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p. 56~60.
- 8) 젊은세대는 정신적인 면 혹은 인간적인 면을 소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는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잔소리가 많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p. 37~40.

「한국인의 변화하는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⁹⁾ 20대 여성

<표 7> 결혼제도에 대한 선호도와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결혼제도 선호도				
일부일처제	57.5	75.5	76.8	91.6
독신	36.0	13.2	14.7	1.7
계약결혼	16.8	7.4	7.9	4.7
동거	7.5	2.2	2.1	2.0
	20대여성	30대여성	40대여성	50세이상여성
혼전순결지켜야				
그렇다	38.4	50.0	67.3	81.3
아니다	61.6	50.0	32.7	18.7

* 출처: 「중앙일보」, 1995. 4. 15.

의 절반 이상(53.1%)이 일부일처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20대의 24.0%가 결혼을 꼭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 50세 이상은 75.7%, 40대는 47.7%, 30대는 42.2%가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20대는 윗사람과 맞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⁰⁾ 또한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0대 여성의 경우 61.6%이고,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38.4%이고, 선

9) 중앙일보 실지 여론조사 「한국인 변화하는 의식」, 1995년 3월.

10) 「중앙일보」, 1995. 4. 15.

호하는 결혼제도로 ‘독신’을 꼽은 20대가 36.0%나 되었고, 이는 ‘일부일처제’을 선택한 57.5% 다음이다(<표 7> 참조).

세대간 의식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은 현재의 20대와 30대의 의식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젊은세대는 정치·사회 성향에서도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¹¹⁾ 20대·30대의 69.9%가 선호하는 정당이 없고, 공무원과 교사노조설립을 찬성하는 비율이 62.9%였으며,¹²⁾ 사회개혁의 추진세력으로 ‘시민운동단체’를 압도적으로 꼽고 있다.¹³⁾ 또한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는 각각 27.2%, 28.9%가 잘해 왔다고 평가하여 50세 이상의 44.1%의 긍정적 평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⁴⁾ 20대, 30대의 독특한 의식구조는 여타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현안보다는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 등 경제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승진’, ‘주택마련’보다 ‘자기계발’, ‘경제적 윤택’, ‘건강’을 바

-
- 11) 선호하는 정치인도 20대와 30대는 40대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신문방송연구소」, 「한국일보」 실시 여론조사 참조(1995. 4), 「한국일보」, 1995. 4. 18.
- 12) 「한겨레신문」, 「현대리서치」 실시 여론조사(1994. 12), 「한겨레신문」, 1995. 1. 1.
- 13) 시민운동단체가 응답자의 82.8%이고 다음으로 기존 민중운동세력, 민자당 민주계, 민주당 개혁 모임, 민자당 민정·공화계, 민주당의 순이었다. 「경실련 청년회」, 「민주사회로 함께 가는 젊은 이웃」 실시 여론조사(1994. 1), 「조선일보」, 1994. 2. 17.
- 14) 「국민일보」, 「극동문제연구소」 실시 여론조사(1994. 11), 「국민일보」, 1994. 12. 10.

라고 있다.¹⁵⁾

20대와 30대가 비슷한 의식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신세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20대의 의식구조는 다른 세대들과 더욱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20대를 집중 분석한 여론조사에 따르면,¹⁶⁾ 20대는 스스로 진보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30대보다도 2배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급진적이고 친야적이고 체제변화

<표 8> 본인의 정치 성향 평가 (단위: %)

	보수·진보	점진·급진	친여적·친야적	체제안정적·체제변화적
20대	0.35	0.35	0.57	0.54
30대	0.17	0.23	0.51	0.28
40대	-0.14	0.04	0.25	-0.23
50세이상	-0.46	-0.36	0	-0.35

* 0점을 기준으로 매우보수, 매우점진, 매우친여적, 매우체제안정적은 -3 매우진보, 매우급진, 매우친야적, 매우체제변화적은 +3 중도는 0으로 해서 점수화

** 출처: 「중앙일보」, 1995. 8. 16.

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표 8> 참조).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20대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계급갈등(기업주와 근로자)을 꼽고, 다음으로 계층갈등(부유층과 서민), 영호남 갈등,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갈등, 세대갈등, 성갈등의 순으로 꼽

15) 「경실련 청년회」, 「민주사회로 함께 가는 젊은 이웃」, 실시 여론조사 (1994. 1), 「한국일보」, 1994. 2. 17.

16) 중앙일보 실시 여론조사 「신세대 정치의식」, 1995. 7~8.

았으나, 30세 이상은 영호남 갈등, 계층갈등, 계급갈등의 순으로 주요 갈등을 꼽고 있다.¹⁷⁾

신세대는 전통적인 가치와도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 장남이 부모를 꼭 모실 필요는 없다는 비율이 전체의 65%였다.¹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가의 식도 상대적으로 회박하다고 볼 수 있다. 18세~29세의 세대에서 전쟁 발발시 '강제로 징집된다면 모를까 자원하지는 않겠다'가 41.6%,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피하겠다'가 23.1%이었으며 '자원하겠다'는 비율은 34.3%에 불과하다.¹⁹⁾ 또한 현재 젊은세대는 사회적 불만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²⁰⁾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도 대단히 높다.²¹⁾

기존의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세대간 의식차이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정치적

17) 「중앙일보」, 1995. 8. 18.

18) 「중앙일보」, 1994. 2. 4.

19) 「중앙일보」 실시 신세대 의식조사 (1994. 1), 「중앙일보」, 1994. 2. 4.

20) 일본 총무청이 한국, 미국 등 11개국의 18세~24세까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젊은이는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21%에 불과해 러시아(5.1%) 다음으로 낮았다. 사회만족도는 스웨덴(64.6%), 태국(62.7%), 독일(44.6%), 일본(43.5%), 미국(43.1%), 필리핀(36.9%), 영국(31.4%), 프랑스(23.5%), 브라질(21.3%)의 순이다. 직장만족도는 59.9%로 역시 일본(58%) 다음으로 낮았다. 직장만족도는 브라질(89.4%), 독일(87.6%), 태국(85.7%), 프랑스(83.1%), 스웨덴(82.1%), 미국(80.7%), 영국(80.4%), 필리핀(71.1%), 러시아(69.9%)의 순이다. 「중앙일보」, 1994. 1. 27.

21)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세대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73.3%), '교통질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다'(68.1%),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71.3%). 「공보처」·「대륙연구소」 실시 청소년 의식조사(1994. 4), 「조선일보」, 1994. 5. 24.

인 차원에서 세대간 의식차이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문제, 경제문제의 순으로 의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대간 의식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의식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역사적 경험의 유무라는 기간효과, 그리고 동기효과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복 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묻는 질문에서 젊은세대일수록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꼽은 반면, 장년들은 한국전쟁을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한 것은 역사적인 경험유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²⁾ 이러한 기간효과는 '5·18 주동자의 기소'와 같은 정치현안에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 20대와 더불어 30대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들이 1987년의 민주화투쟁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간효과의 영향이 큰 반면, 사회적인 문제는 동기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로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성을 포함한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세대가 살아온 사회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세대라고 하는 20대의 사회의식의 다른 세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탈냉전에 따른 이념 중심적인 사고의 퇴조, 성장정책의 결과로 이룩된 경제적 풍요, 사회경제적인 개방 확대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22) 「중앙일보」, 1995. 8. 17.

환경에서 성장한 20대는 탈 이념적이고,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서구적이고 개방적인 의식구조를 갖게 될 수 있었다.²³⁾

한국사회의 탈산업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의식격차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상징되는 정보화사회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 사무자동화와 컴퓨터 통신망의 확대는 재택근무, 자유근무와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작업장의 외적인 환경변화는 직접적인 인간관계(face to face relationship)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기술진보라는 물질적 변화가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라나는 집단은 기존의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배우고 익히기에 대단히 힘든 컴퓨터를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해외통신망(internet)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촉하고 있으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을 통하여 외래문화에도 익숙하고, 한결 쉬워진 해외여행으로 외국문명을 직접 접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아래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는 신세대의 가치지향이 기성세대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도 결과적으로 세대간 격차를 벌리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23) 박재홍,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pp. 655~657.

세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30대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로 세대구분을 하는 경우 30대는 20대와 같이 젊은세대로 분류된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대는 20대와의 괴리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부족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대표적인 세대가 되고 있다.²⁵⁾

현재 한국의 30대가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의식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유신의 몰락과 군사정권의 재등장,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었다. 또한 이들은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정치참여 욕구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기성세대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30대는 상대적으로 집단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위계관계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컴퓨터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고, 세계화와 관련되어 중요시되는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30대는 산업사회적인 가치관을 선호하고 이해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전통적인

24) 세대구분을 시도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한국사회에서 40세가 세대차이의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pp. 13~17; 조혜선,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p. 10.

25) 한국의 30대가 갖는 독특성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연재, “한국의 30대,” 「한겨레신문」, 1993. 7. 5~1994. 4. 26; 이코노미스트 실시 여론조사, “신설러리맨 대해부: 30대가 흔들린다,” 「이코노미스트」, 1995. 9. 6; 1995. 9. 13 참조.

가치관이나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탈산업사회 문화적 상황에 익숙한 20대와도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30대는 현재 가장 주변적인(marginal) 세대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젊은세대인 30대와 20대가 의식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세대간 의식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간 의식차이가 존재하고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세대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역사 인식의 차이와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젊은세대가 새로운 정치체제를 요구하는 정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종 선거과정에서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선거전략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치과정에서 세대문제는 지역이나 이념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세대는 선거과정에서 단지 특수한 유권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젊은세대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정치의 주체로 부각되거나, 정치의 근본적인 변혁을 주도하는 주요한 유권자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크다.²⁶⁾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세대격차가 현단계에서 감추어진(implicit)

26) 20대만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29.2%에 달한다. 20대에서 정치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9.3%로 제일 높다(30대 8.2%, 40대 4.2%, 50세 이상 7.7%). 또한 '기존의 틀을 깨는 세 정당을 기대한다'는 비율도 20대가 31.9%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30대가 25.8%, 40대가 21.1%, 50대가 19.1%의 순이다. 「중앙일보」, 1995. 8. 16.

세대갈등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세대격차는 드러난 (explicit) 세대갈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공동체 형성에 역기능적일 수 있다. 정보화, 탈산업화된 사회환경에 익숙한 신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기득권 유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 경우 사회적인 차원의 세대갈등이 격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은 지체될 수도 있다.

2.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세대간 인식의 격차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²⁸⁾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세대에 상관없이 대부분 도와줄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제일 많았으나 협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응답비율은 20대가 29.9%이고 30대는 21.1%인 반면 40대와 50세 이상은 각각 13.5%와 11.0%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경계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반대로 50세

27) 이와 같은 문제는 가족적인 수준에서부터 공공조직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생겨날 수 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 선배와 후배와의 갈등,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간부와 비간부의 갈등,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간의 갈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8)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표 9> 세대별 북한 인식 (단위: %)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도와줄대상	37.5	41.5	41.0	38.1
	협력대상	29.9	21.1	13.5	11.0
	경쟁대상	3.0	2.2	2.4	2.5
	경계대상	25.4	28.6	33.1	39.0
	적대대상	4.2	6.5	1.0	9.2
	무응답	0.0	0.0	0.0	0.3
북한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	30.8	24.1	25.5	16.4
	부정적	66.9	73.9	70.5	83.6
북한의 변화	변화하였음	73.4	69.9	74.1	69.1
	변하지않음	26.6	30.1	25.9	30.9
북한 체제 유지 요인	김일성·김정일 주민신뢰	11.9	21.5	20.0	18.1
	경제생활만족	1.6	1.7	1.5	12.4
	이념통일	25.4	23.1	20.0	19.2
	정보통제	31.7	36.4	29.2	23.7
	주민감시	28.6	16.5	27.7	39.0
	기타	0.0	0.8	1.5	0.0
	무응답	0.8	0.0	0.0	0.0

* 출처: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p. 10~26.

이상이 39.0%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33.1%, 30대가 28.6%, 20대가 25.4%의 순이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세대별로 비율이 차이가 있다. 젊은세대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0대에서 북한이 변화하였다고 보는 비율이 73.3%로 50세 이상의 69.1%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요인을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는 정보통제능력을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으나 50세 이상은 주민 감시체제를 제일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표 9> 참조).

1995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²⁹⁾ 북한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 세대간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55.7%, 30대가 51.6% 이며, 40대는 40.5%, 50대 이상은 37.2%였다. 1995년은 우성호 납북, 쌀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 등 상대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하에서 세대간 의식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대간 의식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여론조사에서 “주위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별로 하진 않음’, ‘거의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57.9%, 30대는

29)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54.8%, 40대는 56%, 50대 이상은 50.8%였다. 이러한 경향은 면담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관련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를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20대는 대부분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신문의 북한면을 주의깊게 본다는 젊은세대는 거의 없었다. 알고 있는 북한 인물의 이름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세대는 김일성·김정일 정도만을 알고 있었던 반면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사의 숫자가 더욱 많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상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세대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약하고, 북한 체제를 객관화시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통일의 환경에 대해서도 세대별 의식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표 10> 참조).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20대는 ‘없다’는 응답비율이 제일 높으며(45.3%), 30대는 미국이라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나(40.0%, 36.6%), 40대와 50세 이상은 미국이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다수이다(45.4%, 60.9%). 또한 젊을수록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성세대들은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

<표 10> 세대별 통일환경 인식 (단위: %)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통일우호 국가	미 국	22.1	40.0	45.4	60.9
	일 본	2.8	3.0	5.6	1.4
	중 국	7.4	8.0	6.4	6.3
	러 시 아	3.2	2.0	4.4	0.8
	없 다	45.3	36.6	29.5	18.1
	모 르 겠 다	8.3	10.4	8.8	12.5
주한미군 첼수	전 면 첼 수 · 단 계 적 감 축	68.6	57.2	44.2	22.7
	현 상 태 유 지	25.2	34.3	43.4	63.6
	약 간 증 강 · 대 폭 증 강	3.8	4.2	5.6	1.6
	모 르 겠 다	2.3	4.2	6.8	12.5
	국 가 보 안 법	완 전 폐 지	10.6	7.5	6.0
	대 체 법 마 련	27.3	24.9	23.5	14.3
	부 분 적 수 정	43.0	41.3	37.5	16.9
	현 상 태 유 지	9.1	12.9	15.9	23.2
	더 욱 강 화	3.6	5.2	5.2	7.8
	모 르 겠 다	6.4	8.2	12.0	22.8
통일교육 경험	없 다	52.5	56.5	61.8	73.0
	1 ~ 2 회	29.0	26.4	21.9	11.5
	3 ~ 4 회	10.6	8.5	9.6	4.9
	5 회 이 상	7.8	8.7	6.8	10.7

*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p. 55~81.

나, 20대와 30대는 완전 폐지하거나(10%, 7.5%), 대체법을 마련하

여야 한다(27.3%, 24.9%)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이 모든 세대에서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비율이 더욱 높다(40대 61.8%, 50세 이상 73.0%).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환경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의견 차이가 있다(<표 11> 참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젊은세대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민족의 재결합이 첫번째 이유로 선택되었으나 젊은세대는 통일을 통하여 '선진국진입'하기 위해서라는 실질적인 이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19.8%).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도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는 국내정치상황을 중요변수로 꼽는 비율이(33.3%, 29.4%) 40대와 50세 이상의 응답비율(24.7%, 23.5%)보다 높다. 또한 남북경협추진에 대해서도 20대는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은 반면, 50세 이상은 정부가 주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71.8%로 압도적이다.

통일문제에 대하여 각 연령대별로 비교할 때보다 젊은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분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할 경우, 세대차이는 더욱 크다. 신세대로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 및 통일관을 비교한 <표 12>를 보면, 북한이 우리와 공동운명체라는 의견에서도 20대와 기성세대는 10% 남짓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표 11> 세대별 통일정책 인식 (단위: %)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통일의 필요성	필요하다	88.8	91.3	91.6	96.7
	불필요하다	11.2	8.7	8.4	3.3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 재결합	59.9	59.9	62.2	51.8
	이산가족고통해소	5.0	9.3	8.3	22.5
	전쟁방지	14.1	15.0	12.2	20.1
	북한주민생활향상	1.2	1.6	13	0.5
	선진국진입	19.8	14.2	16.1	5.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인지도	잘 알고 있다	4.2	5.2	4.8	4.5
	조금 알고 있다	61.4	58.2	50.2	32.2
	모른다	34.3	36.6	45.0	63.3
통일정책 수립과정	국민여론수렴	18.9	19.9	23.1	22.8
	통일환경변화	22.9	24.1	24.7	19.4
	북한통일방안대처	16.9	15.2	12.7	6.7
	국내정치상황	33.3	29.4	24.7	23.5
	모른다	8.1	11.4	14.7	27.7
남북경협 추진방향	정부주도	47.7	52.7	61.0	71.8
	기업자율	49.4	44.8	33.5	21.2
	경협반대	2.8	2.5	5.2	5.1
	무응답	0.2	0.0	0.4	2.0

* 출처: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p. 83~137.

며,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기성세대는 전쟁 발발이 가능하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엇비슷하나 20대는 과반수 이상(58.4%)이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질화에 대해서는

<표 12> 신세대의 북한 및 통일관 (단위: %)

		20대	기성세대
북한 인식	우리와 같은 공동운명체	83.3	74.2
전쟁 가능성	있는 편	41.3	49.3
	없는 편	58.4	49.8
이질화	회복가능	55.0	47.7
	회복 어려울 것	42.2	47.0
쌀추가지원	지원해야	56.7	41.7
	지원하지 말아야	43.3	56.9
평화협정추진	남북한 당사자간	67.5	47.2
박용길장로 처 리	구속수사	38.3	52.8
	불구속수사	60.4	44.0
선원억류책임	우리책임	34.2	15.3
	북한잘못	55.8	79.2

* 출처: 「중앙일보」, 1995. 8. 22.

20대의 55.0%가 회복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는 47.7%만이 이질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의견차이가 더욱 크다. 신세대는 북한에 대하여 추가로 쌀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7%이나 기성세대는 56.9%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20대의 67.5%가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이러한 의견에 동의

하는 기성세대는 47.2%에 불과하다. 당국에 허가 없이 방북하였던 박용길장로에 대해서도 20대의 과반수(60.4%)가 불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나, 기성세대의 과반수(52.8%)가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또한 북한에 억류되었던 쌀운반선 비너스호에 대하여 기성세대는 우리측의 잘못을 지적한 비율이 15.3%였으나 신세대는 34.2%가 우리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성세대는 경제우위확보, 남북관계개선, 민주화의 달성, 군사우위 확보,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의 순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선과제를 꼽은 반면, 젊은세대는 민주화를 첫번째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다(<표

<표 13> 통일지향의 우선과제에 대한 인식 (단위: %)

	기성세대	대학생
경제 우위 확보	38.3	27.5
군사 우위 확보	13.7	3.8
민주화의 달성	16.8	38.8
남북 관계 개선	26.2	25.7
공산권 교류 확대	4.1	2.0
기 타	0.8	2.2

* 출처: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p. 283.

13>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20대 신세대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세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다.

<표 14> 각 나라의 선호도 (단위: %)

		기성세대	대학생
중	국	70	61
미	국	68	56
일	본	51	25
북	한	42	70
소	련	10	17

* 각 나라가 네번의 축구시합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네번 동일한 나라를 응원할 경우 100점, 세번 응원할 경우 75점, 두번 응원할 경우 50점, 한번 응원할 경우 25점, 한번도 응원하지 않을 경우 0점을 주어 선호도를 측정한 것임

** 출처: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p. 282.

축구경기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비교한 국가별 선호도에서 기성세대들은 중국, 미국, 일본, 북한의 순이나, 젊은세대는 북한, 미국, 일본, 소련의 순이다(<표 14> 참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세대는 북한에 대한 호감 정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관계에서 협조해야 할 나라를 꼽는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대는 협조대상의 첫번째로 북한을 상정하고 다음으로 일본, 미국, 중국의 순이지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은 미국을 첫번째로 꼽고 다음으로 중국, 북한, 일본 순서로 협조대상 국가를 생각한다.³⁰⁾

30) 「중앙일보」, 1995. 8. 30. 물론 대학생들도 북한을 안보를 위협하는 첫번째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나(40.0%), 미국과 일본이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각각 23.0%, 22.3%나 된다. 「한국논단」·「한국객

둘째, 20대가 상대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비록 20대의 8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나, 통일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의 34.4%가 '통일문제를 항상 깊이 염두에 둔다'고 한 반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20대는 28%에 불과하였다(40세 이상의 응답비율은 51.6%).

셋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20대는 55.2%, 30대는 54.6%, 40대는 54.9%이지만 50대 이상은 70.4%이었고 반대로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각각 38.6%, 38.2%이고 40대는 37.9%인 반면 50대 이상은 18.3%에 불과하였다.³¹⁾ 면담조사과정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면담대상자 대부분이 동의하였으나,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젊은세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회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세대들은 '북한지역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40대 이상은 68.0%이나 30대는 50.0%, 20대는 48.8%로 과반

렵」 실시 여론조사 (1994. 4), 「중앙일보」, 1993. 5. 29.

31)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수에 못 미치고 있다.³²⁾ 또한 18~29세의 사람들 중에서 '통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44.7%이나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6.2%에 달하고 있다.³³⁾

넷째, 한국전쟁이나 김일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해 대학생들은 56.7%가 '미·소 초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쟁'으로, 9.3%는 한국전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해방전쟁'으로, 1.8%가 '남한의 북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0.0%에 불과하다.³⁴⁾ 김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후세사가의 평가에 맡겨야'가 43.1%, '민족지도자'가 6.6%, '철저한 공산주의자일 뿐' 18.3%, '왜곡된 공산주의자' 1.3%이었으며, '동족 상잔을 주도한 주범'으로 응답한 비율은 22.6%에 불과하다.³⁵⁾

다섯째, 20대는 남북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 사후 국내외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조문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의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경 의견이 45.1%이고, '적당 수준의 조의표시는 해도 된다'는 전향적 견해는

32) 「청년정책연구소」 실시 여론조사(1993. 7), 「중앙일보」, 1993. 8. 7.

33) 「중앙일보」 실시 신세대 의식조사 (1994 1), 「중앙일보」, 1994. 2. 4.

34) 「한국논단」·「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 (1994. 4), 「중앙일보」, 1993. 5. 29.

35) 앞의 책. 김일성 사후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일성에 대해 50.2%가 '독재자·개인숭배자'로, 36.1%가 '6·25의 전범'으로 평가하였다. 「공보처」·「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 (1994 7), 「서울신문」, 1994. 7. 19.

54.9% 였다. 50대 이상은 45%, 40대는 48.3%가 조의표시를 지지 하였으나, 30대는 51.9%였으며, 20대는 64.4%나 조의표시를 지지 하였다. 특히 20대 초반은 70.8%가 조의표시에 동의하고 있다.³⁶⁾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특별사찰 후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어야 한다’가 55.3%, ‘한국형이 아니어도 주도적 참여 땀 지원해야 한다’가 37.5%,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3%였으나, 50대의 61.2%가 ‘특별사찰 후 한국형 채택’이라는 의견을 지지한 반면 20대는 비한국형이라도 주도적 참여를 하면 된다는 응답 비율이 49.2%나 된다.³⁷⁾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차이는 다음의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통일문제 전반에서 세대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주제에 따라 세대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세대별 의식차이는 근본적 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환경에 대해서는 세대별 의식차이가 훨씬 크다. 젊은세대가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가 없다고 보는 반면, 기성세대는 미국을 지적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도 세대별로 엇갈리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세대별 의견이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에서는 세대별 의견

36) 「경향신문」·「대륙연구소」 ‘남북관계·북미회담’ 여론조사 (1994. 9), 「경향신문」, 1994. 10. 6.

37) 「경향신문」·「대륙연구소」 ‘남북관계·북미회담’ 여론조사 (1994. 9), 「경향신문」, 1994. 10. 6.

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다. 경협이 주체, 쌀 추가 지원, 김일성 조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성세대가 전반적으로 북한인식이나 통일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젊은세대가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기성세대가 많은 반면 젊은세대는 상대적으로 협력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며,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으로 기성세대들은 억압적 통제를 중시하지만 젊은세대는 정보통제나 이념적 통일성과 같은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서도 젊은세대들이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젊은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별 선호도에서 북한을 제일로 생각한다든지, 평화협정에서 남북한의 주도를 강조하는 것은 젊은세대가 주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40세를 기준으로 하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의견차이도 존재하지만 20대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젊은세대가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0대와 30대의 의식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의견이나,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 김일성에 대한 조문 문제 등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간에 의견 격차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20대가 갖는 탈이념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항에서 20대의 의식이 기성세대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30대와도 차이가 크다. 더욱이 10대인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은 20대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³⁸⁾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세대의식이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세대갈등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인 차원에서 진보적인 젊은세대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기성세대의 보수적 세계관이 통일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50세 이상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으며, 냉전시대를 살아온 40세 이상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세대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까닭에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탈이념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북한알기운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남북한간에 기본합

38) 서울시내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48.6%로 제일 크고, 다음으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다(42.3%),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4.8%), 전혀 무관심하다(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필요한 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5.6%로 제일 많았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38.7%였으며,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12.9%나 되었다. 윤종우, 「고등학생의 통일관 및 대북인식에 관한 의식조사」(서울: 통일원, 1995).

의서가 채택되는 등 전반적으로 남북한간에 화해분위기가 지배하던 시절에 성장기를 보냈다는 사실도 젊은세대가 전향적인 대북관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대가 차별적인 의식구조를 갖게 된 것은 민주화와 군사정권의 쇠락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시절 교련으로 대표되는 반공일변도의 교육을 받았으나 20대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차이도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생겨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관한 세대간 의식차이에는 일반적인 세대갈등과 마찬가지로 동기효과와 기간효과가 모두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남북대화와 같은 역사적 사건의 경험유무가 기간효과로서 작용하였다면, 냉전구도와 군사정권과 같은 역사사회적 상황은 동기효과로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IV장 통일과 세대갈등

1. 통일과정에서 세대갈등의 의미

세대갈등이 사회변혁 과정에 영향을 미치듯이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도 통일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세대갈등이 사회발전에 추동력이 될 수 있듯이, 통일문제에 관한 세대갈등도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오랜 동안 지속된 것은 전쟁을 통하여 상호 적대감이 일반 사회구성원들 간에 철저히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이 남북한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기본적으로 남한이나 북한 모두 전쟁세대와 냉전세대가 퇴조하는 것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¹⁾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기성세대의 북한 및 통일관이 다음 세대에 기계적으로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물리적인 세대교체가 정치사회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대간의 견해 차이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통일 이후라는 문제의식에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대갈등

1) 독일의 통일에서도 전쟁과 파시즘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세대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 통일 주역은 동독 신세대,” 「뉴스플러스」 (1995. 11. 3), p. 47.

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일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갈등은 대부분 남북을 축으로 발생할 것이다. 남북한 가치관이나 규범의 갈등, 남북한 문화간의 갈등, 남북한 언어간의 갈등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일 이후의 세대갈등은 상대적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갈등의 축과 유리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갈등이 남북한을 통틀어 청소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세대갈등이 역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정책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수립되고 집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통일정책의 수립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대간 인식 차이가 심각할 경우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정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이나 의미 등은 통일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견은 통일정책의 목표, 방향, 접근방법 등 통일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특정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둘째, 통일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현재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주도세력과 통일의 실제 당사자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심각하다면 마치 설계자와 건축가가 따로 노는 것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현정부도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 통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실질적인 주체는 현재의 젊은세대(30대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또한 제도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통일은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과정은 체제 통합에 상관없이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현재의 20대와 30대가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의 세대갈등은 통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통일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인 통합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²⁾ 특히 사회통합 과정에서는 사회집단별로 상황이 다르게 전

2) 독일의 경우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Der Spiegel*지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 첫번째 조사에서 동서독주민들은 40여년의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치점을 보였으나, 1991년의 조사에서는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조사에서는 반목이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ie neue Mauer wächst," *Der Spiegel*, Nr. 3 (1993), pp. 52~59.

개될 수 있다.³⁾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젊은세대는 통일독일이라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반면, 취업가능 연령이면서도 재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50대가 사회심리적 혼란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젊은세대가 통일독일에 적응을 해 나아가고 있으나 극우적인 행동의 주력은 청소년층이다. 한국의 경우 남한에서도 현재의 세대갈등이 뚜렷하지만, 북한에서도 세대갈등의 조짐이 있다.⁴⁾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문제에 세대갈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접목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세대갈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는다면 현재의 통일에 대한 세대갈등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열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젊은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희박하고, 청소년들에게

3) 이우영,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 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81~382.

4) 북한 소설을 보면 세대갈등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제하에서 항일혁명 운동을 했던 1세대, 청년시절 한국전쟁을 겪고 살아온 2세대, 전후세대인 3세대, 현재 20대인 4세대로 세대구분을 하고 있다. 머리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 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조선문학」(1993. 7), pp. 4~5.

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38.7%였으며,⁵⁾ 중학교와 대학교 학생까지 포함한 한 조사에서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생 수는 전체의 39.4%에 불과하였다.⁶⁾ 필자가 면접한 대상자 중의 10대와 20대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갖고 있었다. 통일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젊은세대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세대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분단으로 이질화가 심화되어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슷한 경향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나타난다. 청소년의 경우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하는 비율이 68.9%이고, ‘일상생활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1.8%나 된다.⁷⁾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일정책의 위상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통일정책이 우선적인 정부과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추진은 젊은세대의 욕구와는 상치된다. 따라서 통일을 중시하지 않는 지금의 젊은세대가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국가 정

5) 윤종우, 「고등학생의 통일관 및 대북한인식에 관한 의식조사」, p. 9.

6) 박성희·박정선,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호 (1993 여름), p. 73.

7) 앞의 책, p. 76.

책에서 통일정책이 차지하는 우선 순위는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에 불편이 초래될 전망이 우세해지면 현재의 젊은세대는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젊은세대가 또 다른 의미의 반통일세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차이는 통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젊은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희박하다. 일반인들은 51.6%가 북한주민에 대해서 동포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반면, 청소년(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49.9%, 고등학생은 17%만이 북한주민들을 동포로 생각하고 있다.⁸⁾ 따라서 젊은세대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면담과정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0대와 20대의 대부분이 잘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쌀지원을 찬성한 기성세대와 찬성한 이유가 다르다. 즉 기성세대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젊은세대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8) 앞의 책, p. 75; 윤종우, 「고등학생의 통일관 및 대북한인식에 관한 의식조사」, p. 15;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p. 8.

나라에도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젊은세대가 민족의식이 희박한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였다(<표 15 참조>). 그러나 한국의 젊은세대와 비교해 본다면 동독의 젊은세대는 상대적으로

<표 15> 서독인의 민족의식 (단위: %)

		14-29세	30-49세	50-59세	60세이상
독일은 하나의 민족인가	하나의 민족	65	74	93	90
	두개의 민족	34	26	6	9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국가인가	하나의 국가	16	15	22	32
	두개의 국가	83	85	77	67
동독은 외국인가	외국이다	51	38	17	12
	외국이 아니다	48	61	83	88

* 출처: WELT-Umfrage, Teil 1 vom 27, Oktober 1987.

민족의식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개의 국가로 보는가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명분이 호소력이 있으나, 별개의 국가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겪어야 할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도록 설득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에 발생하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의견차이는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1994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김일성 사후의 조문문제나 1995년도에 최대 현안이었던 대북한 쌀지원 문제에 대해서 세대간 이견의 폭이 크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와 같이 특정사항에 대한 세대간 의견차이가 클 경우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정책의 내용에 따른 불만 표출이 일상화될 수 있다. 즉, 젊은세대의 성향을 중시한다면 기성세대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반대로 기성세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젊은세대의 외면을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간의 견해차이는 현안 해결과정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정책이 국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다른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도 중장기적인 목표하에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겨나는 현안에 대하여 첨예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심화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통일정책에서 보여지는 세대간 갈등이 단순히 현안에 대한 견해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북관, 통일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김일성에 대하여 조문하는 행위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김일성에 대한 시각,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며, 마찬가지로 북한에 쌀을 얼마나 주었는가 혹은 그 방식은 제대로 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과 같은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북한간에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대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그 갈등의 폭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통일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2. 세대갈등 해소방안

사회갈등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비록 외면적으로 사회갈등이 현재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갈등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현재화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갈등을 통하여 사회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사회갈등을 해당 사회(국가가 아닌)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사회갈등은 그 사회를 해체시키거나, 아니면 사회갈등을 빌미로 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 혹은 세대간 의식차이가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를 완벽하게 일소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

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각각의 세대가 다른 세대의 고유한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세대갈등 해소의 목표가 두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세대갈등이 표출된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통일문제에 국한된 세대갈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통일정책에 전반에 대하여 기성세대들이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젊은세대들이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세대별 의식차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향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대갈등과는 다른 양상의 세대갈등이 전개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세대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기성세대가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세대갈등과 연관된 문제라면 사회적인 차원의 세대갈등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채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을 둘러싼 특수한 세대갈등이라면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세대갈등이 각 세대들의 상이한 역사적 경

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상호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의미한 통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⁹⁾ 상대적으로 통일교육이 경험이 많다고 하는 현재의 20대 중에서도 통일교육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전체의 52.8%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85.3%에 이른다.¹⁰⁾

일차적으로 통일교육은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이 교과목에서 제외된 후 이를 대체하는 통일관련 교과목은 교과과정내에 독립되어 있지 않다. 초등이나 중등교과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교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¹¹⁾ 각 교과과정의 일부 단

9) 현재 교육과정에서 국어과는 북한 또는 통일에 관련되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사회에서는 '국토통일과 국제화 시대의 한국'으로 1개장을 할당하고 있으며, 국사는 '북한의 정치, 경제'를 제시하고, 경제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북한 또는 통일에 관련되는 부분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도덕·윤리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을 교육하기 보다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22호 (1994 겨울), p. 173.

10)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결과」, p. 80; 윤종우, 「고등학생의 통일관 및 대한인식에 관한 의식조사」.

11) 고등교육과정(대학)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독립된 과목을 개설하거나, 북한을 전공하는 과가 있다. 그러나 초등이나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과목이 없다. 반공교육 시절에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국민윤리 과목이 중등교과과정과 고등교과과정에 있었고, 대학에서는 이태올르기 비판 교육이 필수과목이었다.

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정도이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반공교육에 쏟는 관심만큼의 관심도 없다. 적극적인 반공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세대들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개별 교과과정이 통일과 관련을 맺도록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젊은세대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연관된 문제이다. 기성세대 특히 50대 이상은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국제적인 냉전구도하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탈냉전시대와 같은 환경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기성세대에게 교육하여야 통일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12) 면접조사과정에서 피면접자들에게 알고 있는 북한 지명을 말해보라는 요구를 하였다.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기성세대들은 평양, 원산, 신의주, 개성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알고 있었으나, 현재 대학을 다니거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세대들은 평양 정도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기존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군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까닭에 안보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이 되기가 어렵다. 현실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정립하고 새로운 형식의 사회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강의와 수강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사회교육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공식적인 자문기구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현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특히 통일문제에 차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젊은세대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기존 기구를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세대별로 통일에 관한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13) 통일교육의 경험은 남녀별로 차이가 크다(남성 56.2%, 여성 26.2%).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결과」, p. 80. 이와 같이 남성의 통일교육 경험이 많은 것은 군경험과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면접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수립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수립된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그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정책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가 정부의 적절한 홍보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을 비롯한 문자매체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TV를 비롯한 영상매체를 중시하는 젊은세대라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 매체를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세대별로 홍보의 내용이나 주안점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제V장 결 론

분단 반세기를 맞이한 오늘날까지 통일은 민족적 당위로 인식되었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민족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사회구성원들도 급속히 변화하여 왔고,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상징하는 젊은세대들이 생각하는 민족이나 통일은 기존의 민족관, 통일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의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정책을 수립하거나 정부나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들은 분단과 전쟁을 직접 체험하였던 장년세대들의 입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주도할 새로운 세대의 사고나 경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장년층의 소외감과 반발, 젊은세대의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세대갈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정도가 다르고,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삶의 경험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각 세대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었던 세대들은 반공의식을 내면화한 결과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북한 인식도 적대적이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산업화의 결과로 전쟁을 지나간 역사로 인식하고,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경험한 세대는 진보적인 정치·사회적인 인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통일을 당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세대는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은 약하고, 통일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 관련된 세대간 인식차이가 현단계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대간 인식차이가 북한관, 민족관, 통일관과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갈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갈등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세대갈등을 원천적으로 일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각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통일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정책추진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제반 조건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구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간 인식차이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각 세대들이 어떻게 북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통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정비하고, 각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고유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각 세대의 견해차이를 포괄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다시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세대간 의식차이에 대한 분석보다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 건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현재의 젊은 세대나 청소년세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젊은세대들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독특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대의식을 단지 연령효과로서 파악하여 젊은시절의 일시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현재 젊은세대가 갖고 있는 의식구조는 이 세대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사회변화 양상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젊은세대의 통일문제 인식이 이들이 사회의 주축세력이 되는 시점에는 한국사회의 주류적인 사고방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대별 의식구조의 차이를 따져보고, 새로운 세

대의 성향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말이 새로운 세대의 성향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젊은세대가 민족의식이 약화되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적 당위를 각각의 세대들의 입장에서 찾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작업 속에서 통일에 대한 진정한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1992.
- 김영모·원석조·최현숙. 「한국청소년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1992, 1993, 1994」.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1995.
- 박순성·최진옥.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안청시·최일섭 편.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서울: 집문당, 1987.
- 양 춘.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성음사, 1984.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사회변동과 세대차이: 연구세미나 보고서」.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2.
- 윤종우. 「고등학생의 통일관 및 대북인식에 관한 의식조사」. 서울: 통일원, 1995.
-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1994.
- .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현암사, 1984.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한일 비교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연감: 1991」. 서울: 백산서당, 1991.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한국사회학회, 1990.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탈현대사회의 궤적」. 서울: 새길, 1995.
- 한국일보.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일보사, 1990.
- 한준상.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청소년·여성·노인문제」. 서울: 청아출판사, 1994.
- 현대사회연구소. 「세대간의 정치: 사회의식 비교연구」.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89.
- 현실문화연구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Binstock, R. H & Shanas, 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VNR, 1985.
- Coser, A Lewis.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Y.: Free Press, 1956.
- Eisenstadt, S. 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6.
- Feuer, Lewis A. *The Conflict of Gen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69.
- Glenn, Norval D. *Cohort Analysis*. Berkeley: Sage Publications, 1980.

- Harris, K. Diana & Cole, E. William. *Sociology of Aging*. 최신태 역. 「노년사회학」. 서울: 경문사, 1986.
- Hogen, Dennis P & Eggebeen, David J., and Clogg, Clifford C.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l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6 (May 1993).
- Klineberg, Orfo. et al. *Students, Values and Politics*. N.Y.: Free Press, 1979.
- Mannheim, Karl.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aul Kecskemeti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 Ogburn, William F. *On Culture and Social Chan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4.

2. 논 문

- 강영희. "신세대와 구세대의 고뇌어린 화해." 「사회평론·길」 (1993. 9).
- 고길섭. "신세대론을 비판한다." 「문화과학」 (1994 봄).
- 고영복. "한국사회구조와 세대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4.
- 공제욱. "현대한국 계급연구의 현황과 쟁점."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서울: 한울, 1985.
- 김태완. "한국대학생의 세대의식." 「청년연구」, 1집 (1978).

- 박성희.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0호 (1992 가을).
- 박성희·박정선.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호 (1993 여름).
- 박재홍.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집 (1995 가을)
- .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 안영노. “신세대: 그들의 정치경제.” 현실문화연구회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이득재. “계급에서 세대로.” 『사회평론』 (1993. 3).
- 이우영. “통일 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한국언론학회·중앙일보사 공동주최 심포지움. 『통일 그 이후』 (1995. 9. 21) 발표 논문
- 이인균. “30대: 보수와 진보의 중간지대.” 『읍서버』 (1990. 5).
- 이종원. “청소년연구의 사회구조적 접근: 가족의 사회적 존재양식과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 13호 (1993 여름)
- 정창수. “갈등으로 키운 신세대의 저력.” 『세계와 나』 (1990. 1).
- 조용환.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 연구』, 14호 (1993 가을).

조혜선.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주은우.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21호 (1994 봄).

차중천. “한국사회계층에 관한 실증주의적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인식논쟁」. 서울: 법문사, 1990.

추병완. “청소년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9호 (1992 여름).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22호 (1994 겨울).

한완상.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3권 1호 (1991 봄).

황창순. “청소년문화와 질적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연구」, 11호 (1992 겨울).

Braungart, Richard. “The Sociology of Generations and Student Politics: A Comparison of the Functional Unit Model.” in R. Braungart ed. *Society and Politics*. N.J.: Prentice-Hall, 1976.

Emirbayer, Mustafa and Goodwin, Jeff.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no. 6 (May 1994).

Forner, Anne. 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 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 Kertzer, David I.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 Riley, Martilda W.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987).
- Rintala, Marvine. "A Generation in Politics: A Definition." *The Review of Politics*. vol. 25, no. 4 (1963 Oct.).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 Taukaxhima, R. and Montoro, D. "The Contact Hypothesis: Social and Economic contract and Generational Changes in the Study of Black Anto-Semiticism." *Social Forces* 55 (1976).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연구보고서 95-2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